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정

1957년 3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발기인회 예비회의에서 '신문윤리강령'의 기초를 위임받은 천관우(千寬宇) 기초위원이 연구 작성한 '신문윤리강령안'이 4월 1일 편협 발기위원회에서 설국환(薛國煥)이 기초한 규약안과 함께 채택되어 별도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창립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안건은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총회에서 곧바로 채택되었으며, 1961년 7월 30일 자구 수정을 거쳤다. 1961년 8월 3일에는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가 신문윤리강령을 추가 채택했고 1963년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후신인 한국신문발행인협회에서도 이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1961년 7월 30일 신문윤리요강을 수정 채택한 것은 자율규제기구 설치에 따른 준비작업 때문이었다. 1961년 4월 5일 제6회 정기총회에서 신문의 책임이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자율규제 기구 설치 준비 작업을 운영위원회와 보도자유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가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칙 초안 △윤리실천요강 초안 △신문윤리요강 중에서 윤리실천요강과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했다. 이 작업에는 천관우(千寬宇 서울일일 신문주필·편협 운영위원장), 김용구(金容九 한국일보 논설위원·편협 보도자유위원장)가 전담 기초 하였고 박권상(朴權相 동아일보 논설위원·편협 보도자유위원)이 참여했다. 편협은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이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채택, 통과시켰다.

편협은 또 고재욱(高在旭)회장, 천관우(千寬宇)운영위원장, 김용구(金容九)보도자유위원장을 대표로 선정해 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에 대해 협조 요청을 협의하도록 했다.

편협은 이때 만들어진 신문윤리강령을 1996년 4월 8일 제 40회 신문의 날을 맞아 개정, 선포했다. 그동안 “신문윤리강령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수정작업이었다.

편협은 앞서 1995년 6월 신문협회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를 구성, 10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1996년 2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새 윤리강령은 언론의 책임을 새삼 강조했으며, 규제대상을 종전의 28개 부문에서 60개 부문으로 확대시킨 점이 특징이다.